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의 장면



11월 내내 미국·유럽연합(EU) 및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완성된 형태의 세부원칙(모델리티)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펠코너 농업협상 의장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최근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은, 우리 농업에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농연은 12월 12일(월) 총 170여명의 대규모 투쟁단을 파견하여, 전 세계의 농민단체들과 함께 홍콩 WTO 각료회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월간 한농연 12월호에서는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의 준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특히 11월 19일 끝난 APEC 정상회의 결과가 DDA 농업협상에 미칠 직간접적인 파장을 따져보고, 펠코너 의장과 라미 사무총장이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한다.

APEC 정상회의...DDA 농업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WTO DDA 협상 APEC 정상 특별선언문' 과 '부산 선언문' 을 채택하였다. DDA 협상이 전반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모델리티)에 대한 완전한 합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운데 발표된 이들 선언문들은, 언뜻 DDA 전체 협상의 흐름과는 별 상관없이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은 세계 무역의 약 50%, GDP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DDA 협상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언론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특히 이들 선언문들은 프랑스와 유럽연합(EU)를 직접 겨냥하여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폐지와 함께 △2006년말까지 DDA 협상을 종결시킬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 브라질 톨라 대통령과 이들 내용에 대해 원칙적

[표 1] WTO DDA 협상 APEC 정상 특별선언문

1. (중략) ... 도하 라운드는 도하 선언에서 수립된 높은 수준의 협상 목표를 유지하면서 2006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4. 모든 WTO 회원국들은 라운드 종료시 야심차고 전반적으로 균형된 결과를 성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 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중략)
5. 우리는 농업협상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여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들의 장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분야에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회피하거나 낮추는 것은 전체 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표 2] 제13차 APEC 부산 선언문

(중략)...우리는 과감하고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DDA 협상을 더욱 신속하게 진전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략)...우리는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FTAs)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가진 RTAs/FTAs를 지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RTAs/FTAs 협상에 있어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RTAs/FTAs 무역원활화 모델조치」를 환영하였으며, 2008년까지 공동으로 합의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모델조치를 개발토록 촉구하였다.

으로 합의를 한 직후 APEC 정상회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은 '비농산물 및 서비스 협상 분야에서 가시적인 양보가 없다면 농업협상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프랑스와 유럽연합(EU)에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관세감축 및 국내 보조 감축 등에 대한 직접적 표현은 없었으며, APEC 정상회의 전 각국 정부와 충분히 조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와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국가들은, EU(유럽연합)의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협상 전략을 그간 구사해 왔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EU가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관세상한 △구간별 관세감축율 △민감품목·개도국 특별품목 수 설정 △개도국 특별취급품목(SSM) 설정 문제 등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국내보조 삭감 및 수출보조금 철폐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EU가 실제 미국·브라질·인도·호주와 일종의 '빅딜'을 성사시켜 자국 농업의 보호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농업보호와 농민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일관된 DDA 농업협상의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APEC 정상 선언문과 같이 지금까지의 농업협상의 성과마저 위협할 수 있는 돌출적 상황을 피하면서, 여타 WTO 회원국들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협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 펠코너 의장과 라미 사무총장의 세부원칙(모델리티) 초안의 의의와 대응 방향

11월 23일 펠코너 농업협상 의장이 각 회원국에 지금까지의 DDA 농업협상 논의 결과를 요약·정리한 모델리티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26일에는, 라미 WTO 사무총장이 펠코너 의장 초안과 거의 유사한 세부원칙(모델리티)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부원칙 초안은, △미합의 쟁점은 그대로 쓰고 △의견 차이가 좁혀진 쟁점은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단순히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관련 주요 수치를 분석해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에 매우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상한 설정 및 구간별 관세감축 수치를 볼 때, 참깨·인삼·고구마·감자·마늘·양념채소 등에 있어서 큰 폭의 관세감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보조에 있어서도 무역왜곡보조와 AMS를 최대 60~70% 수준의 대폭 감축을 명시하고 있어, 쌀을 포함한 국내 농업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 농산물 관세 감축(시장접근) 분야

- ① 관세감축 구간은 4개로 나누자는 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간 내 관세감축 방식은 단순 선형 감축방식(UR 협상 때처럼 일정 시기동안 매년 같은 폭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나라 등 G10 국가들은 신속적인 관세감축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G10 국가들은 관세상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75~100%의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간	관세구간 경계 및 범위	관세구간별 감축율
1	0~20/30% 이하	20~65%
2	20/30~40/60% 이하	30~75%
3	40/60~60/90% 이하	35~85%
4	60/90초과	42~90%

- ② 민감품목의 수를 정하는 문제는, 전체 농산물 중 1%(미국·브라질·인도·호주 등)에서 15%(우리나라)로 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③ 개도국 특별품목(SP)의 수를 지정하는 문제는, 전체 농산물 중 20%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은 반대 입장이다.
- ④ 개도국은 관세감축 및 TRQ(의무수입쿼터) 확대에 있어 예외조치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은 시장접근 개방 정도를 보면서 신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⑤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하였으나, 이의 발동을 위한 물량·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크다.
- ⑥ 관세 감축에 있어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관세 감축을 대비 %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관세상한은 150%로 하자는 입장과 개도국에 대해서는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개도국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나. 국내 보조 분야

①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관련 제안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은 최하위 구간 혹은 별도 구간에 배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선진국>

구간	구간범위	해당국가	감축율
1	0~100억 달러	기타 선진국	31~70%
2	100~600억 달러	미국·일본	53~75%
3	600억 달러 이상	EU	70~80%

② AMS 감축 관련 제안은 다음과 같다. 품목특정 AMS 상한을 정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개도국은 적절한 우대조치를 강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구간	구간범위	해당국가	감축율
1	0~120/150억 달러	기타 선진국	37~60%
2	120/150~250억 달러	미국	60~70%
3	250억 달러 이상	EU·일본	70~80%

③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선진국은 50~80%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주장 제시되었다. 다만 개도국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⅓ 이하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④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블루박스)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⑤ 허용대상 직접지불제도(그린박스)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태다.

다. 수출 경쟁 분야

① 수출보조금 정책을 조속히 철폐하자는 주장과 품목별로 차등 철폐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으나, 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②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